

1 공동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국회의원 및 교육·여성·시민단체 50여개 연대, 불법촬영·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 및 탄원서명 전달 기자회견 개최

불법촬영·딥페이크 성범죄, 7천인 “엄정 처벌 촉구” 탄원서명 국회의원 및 교육·여성·시민단체, 인천지법 앞 기자회견

-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 여전! 국회의원 및 교육·여성·시민사회단체 등 50여 단체 동참, 7천여 명 불법촬영,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해 엄정 처벌 필요! 탄원서명
- 백승아 의원 “입법과 정책을 통해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 인천여성회 손보경 회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강주수 상임대표 현장발언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이므로 엄정 처벌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줄 것 요청
- 인천교사노조, 인천교총, 전교조 인천지부 공동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피고인의 엄중 처벌, 피해자를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지난해 인천 모 고교에서 발생한 교사 대상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국회의원 및 교육·여성·시민사회 단체들이 17일 11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백승아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국회의원을 비롯해 교육·여성·시민단체 등 50여 단체가 연대하여 피해자를 지지하고 재판부의 단호한 판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전국의 교사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대 탄원서명운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총 7천여 명이 참여한 서명지와 탄원서는 이날 법원에 공식 제출됐다.

이날 현장에는 인천의 교원3단체의 대표인 인천교사노동조합 김성경 위원장,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이대형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최지은 지부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강주수 상임대표, 한국노총 인천본부 김영국 의장, 인천여성회 손보경 회장, 한국여성인권플러스 김성미경 대표,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기자회견문은 연대단체 50여 곳을 대신하여 인천의 교원3단체 대표가 함께 발표했다.

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이뤄져야만 이 땅의 교사, 학생, 교육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다”며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과 사건의 중대성을

밝히며 첫째, 피고인의 엄중 처벌, 둘째, 피해자를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 셋째,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24년 7월 한 학생이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불법촬영하여 이것을 이용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증거를 직접 수집해 경찰에 제출했고, 가해 학생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퇴학 조치 후 검찰에 송치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고,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대독문을 통해 “AI 기술을 악용해 교육공동체 내 교사와 학생의 얼굴을 성착취 영상에 합성·유포한 이 사건은 명백한 성범죄이자 인권 침해”이며, “이제는 교육 현장을 파괴하는 이 범죄를 단호하게 다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엄정 처벌과 정부의 역할을 당부하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성범죄 문제를 결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겠다 … 입법과 정책을 통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는 이날 공개된 대독문에서 “나는 그저 교단에 섰을 뿐”이라며 “장난이 아닌 범죄에 대해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회가 응답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제자에 의해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이후 “제 사생활과 인격,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고백하며, “성범죄 피해자인 저는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학교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수사기관과 재판정 앞에서도 끊임없이 설명하고 해명해야 했다. “합리적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그런 상황이 없었을 것이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심과 판단 앞에 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사생활을 반복해서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은 사회적 인식이 낮아 회복에 집중하기보다 피해를 직접 증명하고 해명하며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참석한 인천여성회 손보경 회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 범죄가 아니다. 이는 여성을 대상화하고, 소비하고, 지워버리는 디지털 기반 성폭력이다. 피해자에게 “이건 가짜잖아”라고 말하는 이 사회의 냉소, 가해자를 “미성년자니까” 보호하려는 사법의 관대함, 기술 앞에 법과 윤리를 무력화시키는 정부의 무책임이 이 끔찍한 성범죄를 가능하게 했다.”며 “학교는 배움의 공간. 그 배움은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사들은 학생의 휴대폰을 두려워하고, 촬영당한 얼굴이 어디서 어떻게 유포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 교육은 안전해야 한다. 가르치는 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성폭력 없는 사회는 기술이나 검열만으로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대책은 ‘성평등한 인식과 구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강주수 상임대표는 현장 발언을 통해, “작년 하반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안타깝게도 우리의 법과 제도, 사회 인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성적 대상화가 되고, 그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일터를 그만 두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 속에 내몰리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사생활 침해나 이미지 조작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철저히 짓밟히는 인권침해이자 명확한 범죄”라며 재판부에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단체들은 향후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교육청 대응 체계 개선, 피해자 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2025. 6. 17.

- 연대 탄원 및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체 52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
경인교육대학교 통합 15대 총학생회, 교사노동조합연맹(인천교사노동조합 포함 24개
가맹노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새로운학교인천네트워크, 인천교육연구소, 인천교육정책원,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인천실천교육교사모임,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경남여성회, (사)경주여성노동자회, (사)대구여성노동자회, (사)대구여성의전화,
(사)대구여성회, (사)인권희망강강술래,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사)인천여성회,
(사)포항여성회, (사)한국여성인권플러스 일동

2 사건 경과 및 연대 탄원 결과 보고

(인천교사노동조합 최연선 수석위원장)

◎ 사건의 경과

- 해당 사건은 작년 2024년 7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요청하였음에도 디지털성범죄의 피의자 특징이 어렵다는 등 사법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직면하고, 8월 피해자가 직접 자체적으로 추가 피해 상황 및 피의자 추정 등 정보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한 사건입니다. 인천교사노조는 교내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육감 대리 고발을 요청하였고, 10월 시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감 대리 고발을 결정·실시되었습니다.

인천교사노조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의 보완 수사 및 검찰 송치를 위해, 전국 교사 연대 탄원 서명(5410명)을 수합하여 남동경찰서 제출 및 기자회견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피고인의 계정에는 다른 피해자들의 땀페이크 합성물이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었으며, 피고인이 게시물 삭제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음을 피해자가 인지하고 알렸을 때에서야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5월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판을 참관하며 사법기관 및 우리 사회가 여전히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경청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러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시민사회·여성단체가 함께하겠습니다.

◎ 탄원 결과 보고

공동주최로 연대해주신 교육·시민사회·여성단체 52개, 탄원서 77부, 서명운동 7,044명 제출을 통해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기자회견 끝나고 법원에 탄원서와 서명운동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독: 인천교사노동조합 최연선 수석위원장)

“딥페이크 성범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AI 기술을 악용해 교육공동체 내 교사와 학생의 얼굴을 성착취 영상에 합성·유포한 이 사건은 명백한 성범죄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 악용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직접 겨냥한 심각한 교권 침해이자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이제는 교육 현장을 파괴하는 이 범죄를 단호하게 다뤄야 합니다.

피해자는 일상의 존엄을 짓밟히고, 가해자는 ‘호기심’이라는 이름으로 가볍게 처벌받는 현실. 이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저는 묻습니다.

왜 피해자가 증거를 모아야 합니까?

왜 미성년 가해자라는 이유로 죄의 무게가 줄어들어야 합니까?

저는 요구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십시오.

정부와 교육청은 피해 교사와 학생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플랫폼 책임 강화, AI 성범죄 대응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저 백승아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성범죄 문제를 결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겠습니다. 교육 공간에서 벌어진 디지털 성범죄는 교육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 문제입니다. 입법과 정책을 통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앞장 서겠습니다.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가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 없는 교육 환경, 기술 윤리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피해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피해교사 발언으로, 인천교사노동조합 한현정 교권국장님이 대독하겠습니다.

4 발언문1

(대독: 인천교사노동조합 한현정 교권국장)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이번 사건의 피해 교사입니다.

한 사람의 교사로서, 그리고 학생들의 삶에 책임감을 지닌 어른으로서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제 마음은 무겁고 두렵고 간절합니다.

지난해, 저는 제가 가르치던 제자에 의해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참담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가르치던 제가, 그 학생의 손에 의해 제 사생활과 인격,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제 의사와 무관하게 촬영된 사진과, 그것을 기반으로 생성된 성착취 합성물이 SNS에 유포되며, 저는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신의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저는 학교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수사기관과 재판정 앞에서도 끊임없이 설명하고 해명해야 했습니다. “합리적 피해자라면 그런 상황이 없었을 것이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심과 판단 앞에 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사생활을 반복해서 침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피해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일상복을 입고 교단에 섰을 뿐입니다. 수업을 위해 교실에 들어섰을 뿐입니다. 그 어떤 교사도 학생에게 성적 대상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교실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이, 제자에 의해 불법 촬영되고 합성되어 유포되는 현실이 과연 정당할 수 있습니까?

가해자는 피해자의 외모, 옷차림, 표정, 자세까지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덧씌워 성적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 행위의 결과로 저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교사로서의 명예와 삶의 기반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저 한 사람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단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안전과 존엄이 위협받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판결이, 학교가 더이상 범죄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교사라는 직업이 다시는 침묵과 방관 속에서 성적 대상화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함을 엄중하게 판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2025년 6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제 모든 용기를 내어 이 탄원서를 씁니다.

제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인천여성회 손보경 회장)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 범죄가 아닙니다. 이는 여성을 대상화하고, 소비하고, 지워버리는 디지털 기반 성폭력입니다. 피해자에게 “이건 가짜잖아”라고 말하는 이 사회의 냉소, 가해자를 “미성년자니까” 보호하려는 사법의 관대함, 기술 앞에 법과 윤리를 무력화시키는 정부의 무책임이 이 끔찍한 성범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범죄는 단순히 기술을 이용한 장난이 아닙니다.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고, 딥페이크 영상에 음란물로 합성해 온라인에 유포했습니다. 이것은 ‘호기심’도, ‘장난’도 아닌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이며 성착취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린 것이자, 모든 교사에게 “너도 언제든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안긴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한 폭력입니다.

딥페이크는 단지 AI 기술로 얼굴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어떤 권력이 쥐고 있는가, 그 권력이 누구를 침묵시키는가가 바로 문제의 본질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여성의 얼굴은 동의 없이 복제되고, 조작되고, 소비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성평등이 뿌리 내리지 못한 사회에서 기술은 여성에 대한 지배 수단으로 악용됩니다.

학교는 배움의 공간입니다. 그 배움은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사들은 학생의 휴대폰을 두려워하고, 촬영당한 얼굴이 어디서 어떻게 유포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교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교육자, 모든 여성, 모든 시민이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평등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한, 우리는 반복해서 이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안전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성폭력 없는 사회는 기술이나 검열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성평등한 인식과 구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평등 없는 학교, 기술만 앞선 사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동의의 의미, 디지털 인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하고 미성년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권 침해에 대한 가중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모든 과정에서 국가는 젠더를 삭제하지 말고 현실 상황과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기반한 실제적인 대응을 이어 나가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성평등 컨트롤타워로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방지에 관련된 예산을 복원하고 피해지원, 성평등교육, 정책실행 등의 역할을 이행해야 하며 디지털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여 딥페이크 범죄의 제작·소지·유포·협박까지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딤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해자는 반성문 몇 장으로 선처를 요구합니다. 재판부, 그리고 정책 결정자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엄중히 다루주십시오. 이번 판결은 피해자에게는 회복과 존엄을,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우리 사회 모두에게는 더이상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내게 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내 얼굴은 네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이미지가 아니다.”

“딤페이크는 창작이 아니라 성착취다.”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안전한 학교를 원한다.”

6 발언문3

(인천평화복지연대 강주수 상임대표)

반갑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강주수입니다.

작년 하반기 전국 200여개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교사와 학생 등을 불법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에 딤페이크 기술로 조작된 나체사진을 합성한 영상을 SNS상에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천에서도 딤페이크 성범죄가 50여건 이상 발생하였고, 그 중 하나는 고등학교 한 학생이 교사 2명과 학원강사, 학생 등을 촬영하여 딤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편집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달 21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기 5년, 단기 3년의 구형을 내렸고, 이번달 25일 선고공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딤페이크 기술처럼 커다란 위협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특히 딤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법과 제도, 사회 인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딤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성적 대상화가 되고, 그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일터를 그만 두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 속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생활 침해나 이미지 조작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철저히 짓밟히는 인권침해이자 명확한 범죄인 것입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이러한 딤페이크 성범죄에 대하여 중형을 내려 두번 다시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이대형 회장)

“AI 딥페이크 성범죄는 명백한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 무너진 교육공동체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강력 처벌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분노와 절망, 책임감으로 섰습니다.
지난해 7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내·외의 교육공간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일상과 존엄을 무참히 침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기관과 사법부, 교육당국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온라인 '딥페이크 제보방'에는 전국 피해 학교 200개 이상의 명단이 공개되고, 피해 교사와 학생들은 자신의 얼굴이 나체 및 성관계 사진 등에 합성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은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되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범죄에 활용되거나 온라인상에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 및 불안 피해가 극심해졌습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생이 AI 기술을 이용해 학교와 학원의 교사 및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본 사건 역시,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성착취이며, 성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딥페이크 가해자 4명 중 3명이 10대라고 합니다. 사법부가 이 사건을 단순 미성년 범죄로 취급하고 가볍게 처벌한다면, 유사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악랄하고 교묘하게 우리의 일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최지은 지부장)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의자 특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느슨하게 대응했고,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끊임없는 불안, 수치심, 자기검열에 시달리며, 정신적·사회적 고통에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AI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 악용이 아닌, 디지털 기반의 강력한 성폭력입니다. 특히 학생이 교육공간에서 범한 이 범죄는 교육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며, 교육 환경을 근본적

으로 훼손합니다. 피해자들의 삶은 무너졌지만, 가해자는 ‘호기심’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는다면, 이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사건의 중대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모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학교 안팎의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성 착취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적 범죄가 아닌, 학교·학원 전체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반복적이었습니다. 범행에는 촬영물의 조작, 합성, 유포가 포함되며, 명백한 계획성과 고의성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피해자 중 피해 교사는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가해자를 특정해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켜줄 시스템조차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천교사노동조합 김성경 위원장)

이에 인천의 교육계, 시민사회, 여성단체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라!

청소년이 가해자라는 이유로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엄정하고 실질적인 처벌을 시행하십시오.

단지 일부 영상이나 이미지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피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적 대상화와 인격 살인을 동반한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범죄의 사회적 파장을 무겁게 받아들여, 피고인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피해 학생과 교사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을 즉각 마련하라!

정부와 교육청은 교육기관 내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내 성범죄에 대한 전수조사,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교사·학생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 교사들의 심리적 회복, 명예 회복, 안전하게 교육 현장으로 복귀까지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다시는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심리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청과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전담 기구 구성 및 심리상담·법률지원 강화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하라!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한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신속한 삭제 요청 및 차단 조치 의무화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시는 외면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의 입법과 정책이 절실합니다. 기업과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 규제도 함께 추진하십시오.

우리는 피해자를 대신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이뤄져야만 이 땅의 교사, 학생, 교육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회의 모든 딥페이크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다시는 누구도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성범죄 없는 교육 환경, 기술 윤리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울 것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하지 않도록, 정의롭고 안전한 교육 환경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대할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 OUT!
불법촬영, 딥페이크 범죄 엄중 처벌하라!

2025년 6월 17일

- 연대 탄원 및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체 52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
경인교육대학교 통합 15대 총학생회, 교사노동조합연맹(인천교사노동조합 포함 24개
가맹노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새로운학교인천네트워크, 인천교육연구소, 인천교육정책원,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인천실천교육교사모임,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경남여성회, (사)경주여성노동자회, (사)대구여성노동자회, (사)대구여성의전화,
(사)대구여성회, (사)인권희망강강술래,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사)인천여성회,
(사)포항여성회, (사)한국여성인권플러스 일동